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29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8년 12월 4일 (음력 10월 27일) 화요일

광주형일자리 '파란불'...이번 주 협약 체결 예상

노사민정 대타협을 기본정신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의 첫 모델인 현대자동차 광주 완성차공장 투자 협약이 금명간 체결될 전망이다.

3일 광주시 협상단과 시 투자유치추진단 등에 따르면 지난 6월1일 현대차의 광주형 일자리 투자방향서 제출 이후 6개월 간 진행돼온 협상이 오랜 줄다리기를 끝낸 사실상 타결됐고 금명간 협약이 체결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을 주축으로 한 지역 노동계로부터 협상 전권을 위임받은 시 협상단은 3~4일 서울에서 현대차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오늘까지 최종안 논의...이르면 6일께 현대차와 협약 체결

지역노동계 위임 후 광주시-현대차 투자자간 협상 급물살

최종안에 대해 논의한 뒤 이를 토대로 5일께 지역 노동계와 전문가 그룹, 시의회 대표 등으로 구성된 광주시 투자협상추진단의 결의를 이끌어 낸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협상 추진단 결의 등 2단계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이르면 6일께 현대차와의 최종 투자 협약을 체결한다는 계

획이다.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만 광주 완성차공장 합작법인의 제1, 2주주로 참여할 광주시와 현대차 사이의 투자자간 협상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양측의 협상은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 간의 합의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다.

민선 6기 말, 주 40시간 근무에 초인 연봉 3000만원, 임금 및 단체협약 5년 유예에 잠정 합의했으나 '노동계 패싱'과 저임금 고착화, 하청업체 근무조건 악화 등을 이유로 노동계가 반발했고 이에 민선7기 광주시는 임금을 3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인단협 5년 유예조항 수정도 현대차에 줄기차게 요구했다. 현대차도 중요 길목에서 일정 부분 양보의 여지를 보였다.

여야 정치권과 중앙 정부도 3000억원 규모의 광주형 일자리 인프라 구축에 뜻을 같이 했고 문재인 대통령도 공개발언을 통해 힘을 실어줬다.

협상 마지막노선을 수차례 연장하면서도 실낱희망을 이어오던 협상은 민주노총과 현대차 노조의 고조되는 반발 속에 지난달 1일 광주시와 지역 노동계가 내놓은 최종 수정 합의문에 대해 현대차가 경영상 부담 등을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히면서 협상 전선이

급속히 얼어붙었다.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 아래 임금은 추후 경영수지 분석을 거친 뒤 정하고, 노동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주 40시간으로 줄이되 추가 4시간은 시간외 수당을 적용하고, 인단협 5년 유예도 매년 인단협 실시로 수정하자 현대차가 "멘붕"에 빠졌고, 광주시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현대차 경영진은 물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계 반발은 더욱 드세졌고 예산 국회 심의 시한이 임박하자 정치권 일각에서는 "광주 시의 지역 대체 투자설"까지 제기됐다.

교착 상태에 무산 위기로까지 내몰린 현대차 광주형 일자리 협상이 급반전된 건 지난 27일, 지역 노동계가 시 협상단에 대해(對) 현대차 협상 전권 위임을 재확인하면서 포괄적 위임에 동의하고 현대차가 이를 긍정적 신호로 받아들여면서 파란불이 켜졌다.

필요할 경우 적정 임금, 적정 노동시간, 노사 책임 경영, 원하청 관계 개선 등 4대 원칙에 대한 '유연화된 카드'를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면서 양자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와 현대차의 상생을 견인할 수 있는 세부수정안이 제시됐다.

시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은 "포괄적 전권 위임 후 협상이 한결 부드러워졌다. 지역 노동계에 고마운 마음"이라며 "이번주 안에는 좋은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할 각오"라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발길 잡는 산수유 구례군 산동면 입구에 식재된 산수유나무의 열매가 붉은 빛으로 물들어 관광객의 발길을 잡고 있다. 지난달 22일 촬영된 산수유 열매.



책임론

청와대 특별감찰반직원의 비위 정황이 잇따라 드러나자 여론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 수석의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하는 목소리가 처음 나왔다. 박근혜정부에서 민정수석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지낸 조국 민정수석의 위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제 민정수석이 책임질 수밖에 없고 다른 도리가 없는 상황"이라고 고백하며 "조 수석이 언저 시위를 표함으로써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게 비서직으로서 올바른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공직의 시작과 끝은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특히 대통령을 직접 모시는 직책은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더 무겁게 결과에 대한 정무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조 수석에 대한 책임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조 수석이 수개월 전 기각 해이를 인지했음에도 조치하지 않아 논란을 키웠다는 지적이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속재를 상상해 본다.

신봉우 기자 · 자료 사진 = 뉴시스



전남도, '겨울철 복지사각 지대' 집중 발굴

전남도는 2019년 2월 말까지 '겨울철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전남도는 이번 집중 발굴 기간 동안 장애인, 노인 등 고위험 1인가구와 단전, 단수, 단가스 가구 및 사회보장료 체납 가구 등을 중심으로 공적지원 가능 여부를 점검한다.

또 '읍면동 복지전담팀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인적안전망'을 활용해 현장방문을 강화하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적극 발굴한다.

발굴된 위기가구는 긴급복지 사법비의 생계비 등을 우선 지원하고 돌봄 등 복합문제가 있는 가구는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지원하는 것은 물론, 공적급여뿐만 아니라 민간자원을 발굴해 지원하는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가구원 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난치성 질환자를 1인 이상 포함하고 있는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게 겨울철 에너지비우려 지원을 확대한다.

전기, 도시가스 요금 체납 시 공급 중단 유예해 겨울철 필수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는 등 다양한 요금 감면 서비스 연계도 강화한다.

전남도는 지난해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해 복지 소외계층 3만 4777가구를 발굴하고, 이중 긴급지원이 필요한 6850가구에 의료비, 생계비 등 35억 원의 복지혜택을 제공했다.

전남도는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노인·장애인 등 취약가구에서 발생하는 생활 불편 사항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시군읍면동에 '우리동네 해결사 복지기동대'를 운영할 계획이다. 김경환 기자

제16회

보성차밭 빛 축제

★ 매일 밤 흰 눈이 내리는 겨울왕국

2018. 12. 14. ~ 2019. 1. 13.
18:00 ~ 22:00 한국차문화공원 일원